

# 李 “한반도 평화·안정 위해 중국이 ‘중재자 역할’ 해달라”

## 3박4일 방중 일정 마무리

시진핑과 정상회담서 주요현안 논의  
북핵 등 한반도 정세 장시간 의견 교환  
남북 단절 상황에 인내 필요성 언급  
미국·일본과 균형 외교 기조 재확인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3박4일의 새해 첫 순방을 마치고 7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직접 평가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중국을 방문해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취임 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6일엔 중국 공산당 2인자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3인자로 꼽히는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했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陳吉寧)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났다.

방중 일정 마지막날인 7일 이 대통령은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났다. 또 상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상하이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회견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돌아봤다.

한국 정상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지난해 11월 초 경북 경주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정권 동안 사이가 멀어진 두 나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방중 일정은 ‘관계 진전’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중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교감도 많이 이뤄졌던 것 같고, 대답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미국, 일본 등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

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외교 기조인 ‘실용 외교’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 중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이웃국가”라며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 왜 불필요하게 근거 없는 사안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 주석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중요한 의제이며 아주 긴 시간 (시 주석과) 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

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현재 남북은 적대감만 남은 상태라면서 “지금 현재로는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여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현재까지의 대북 정책 노력을 평가하며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인내심’은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총리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맞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하지 않았나”라며 “사실 북한은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할까,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화된 채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 편을 들었다고 ‘종북’이라 할 것인가. 이런 냉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與, 물가안정·RE100 산단 지원 요구… 신성장 산업 육성에 공감

### 당정, ‘경제성장전략’ 협의

반도체·철강 산업 재편 속도 조율  
RE100 산단 중심 지방 성장 전략  
퇴직연금 기금화 1월 발표 가시화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에 생활물가 안정과 RE100 산단 조성 지원을 촉구했다. 당정은 신성장 산업 육성, 철강·석유화학 산업 재편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합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첫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사는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아울러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로 성장 전략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 할인 지원 등 단기 대응과 함께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합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물가안정 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방 주택 수요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당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둘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 산업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이와 더불어 방산,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 산업, 철강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의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번 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또한 ‘5G3특’ 성장 엔진 연계 메가특구 추진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온누리상품권의 상호보완적 운영 방안 마련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랑휴가지원 사업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재정 혁신 측면에서 혁신 조달의 확대, 지방정부의 의무 조달 단계적 폐지 등 조달 행정을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한 후에 당사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과제 중에서 입법 사항 등에 대해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하는 안을 1월 중에 발표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는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지만, 당정은 별도 실무 당정, 고위 당정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1월 중 당정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구윤철 “민생안정 총력”… 계란 224만개 수입·고등어 할인 지원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신설·첫 개최  
SI 확산에 계란·닭고기 수급 선제대응  
물가·일자리·복지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가 올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기조하에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 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민생 최우선 과제인 먹거리 생활물가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

분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급 불안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선란 224만 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대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도 700만 개 이상 충분한 양을 들여와 닭고기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이날 기준 432만 마리로 집계됐다. 바이러스 감염력이 예년보다 약 10배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

부 측 설명이다.

또 고등어에 대해 8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하고 노르웨이산에 편중(77%)된 수입 비중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 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로 방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 효율화 및 경쟁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며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세 기자 kys@